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3.9.6.(수) 13:40	배포	2023.9.6.(수)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민생금융국 민생금융총괄팀	책임자	팀 장	신동호 (02-3145-8266)
		담당자	조사역	김혜진 (02-3145-8263)

금감원,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연수」 실시

- 지자체와의 유기적 협업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이에 따른 대부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 대부업권 현장점검 실무 및 대부업 등록업무 연수 등을 통한 지자체 담당자 실무역량 증진 도모

I.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연수」 개최

- (개요) 금융감독원은 '23.9.6.(수), 본원 대강당에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대상 대부업 실무 연수 개최

* 서울, 경기, 부산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약 100명) 참석

<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연수 연혁 >

- ◆ 우리원은 지자체·금융위로 이원화*된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 하에서 효율적인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12년 이후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연수 실시

* '22.12말 업체수 : 금융위 982개(11.1%), 지자체 7,836개(88.9%)

- (실시배경) 우리원은 '23.5월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개인정보 불법 판매·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적발하는 등
- 최근 대부업 관리·감독 관련 지자체와의 협업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동 연수를 실시할 필요

Ⅱ. 주요 연수 내용

- **(점검 실무)** 대부업법 규제사항, 대부이용자 보호와 관련이 높은 테마(대부광고, 계약 체결 등) 위주 점검 사례 및 점검 기법 소개
 - 특히, 서민 취약 계층 피해 방지를 위해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점검 결과·기법을 소개하여 지자체 담당자 경각심 고취
- **(실태조사)** 대부업 통계의 기초가 되는 실태조사* 작성요령, 제출 방법 및 FAQ 등 평소 지자체에서 자주 질의하는 내용 교육
 -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행안부·지자체와 함께 매 반기마다 대부업 실태조사 발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지역별 대부업자들의 보고서를 취합, 금감원에 제출
- **(등록 실무)** 대부업 등록 유형별 절차 및 구비서류, 접수시 유의 사항, 임원·주주 결격사유 안내 및 최근 이슈사항 소개 등

Ⅲ.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기대효과)** 동 연수를 통해 최근 대출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실무역량 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 * 지자체 대부업자 대출잔액(조원) : ('20말) 3.0 → ('21말) 3.7 → ('22말) 4.3
 - 지자체와 대부업권 전반의 이슈를 공유하는 등 일관성 있는 대부업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층 피해 사전 예방
 - **(향후 계획)** 동 연수를 매년 주기적으로 진행하여 금감원·지자체 양 관할 기관간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계 유지·구축
- (붙임) 금융감독원·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 합동점검 결과 보도자료 요약

※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의 개인정보 불법 판매,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
대행,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적발

I. 개요

지자체 등록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과 접촉하는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경기도와 함께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추진

II. 점검결과 주요내용

① A대부중개는 개인신용정보(약 20만명 추정)를 고객의 동의 없이 대부업자 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로 1,000원~5,000원)한 사실이 발견되어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

② B·C대부중개는 홈페이지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하여 안전하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 처분 예정이며,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 예정

③ D·E·F대부중개는 제3자의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무단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고,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합동 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지도

④ 아울러,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관련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 주체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고객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를 지도

금번 합동점검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의 IT전문가를 투입하여 대부중개플랫폼의 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데이터 제공 내역, 침해사고 발생여부를 조사하는 등 IT검사기법을 활용하여 다수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할 수 있었음

Ⅲ.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금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 기법 등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계획임

또한, 금융감독원은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계획임

※ 기타 상세 내용은 우리원 2023.5.23.(화) 보도자료 참조